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

문 대통령, 수보회의 모두발언
“평화경제 절실함 재확인
日 경제 넘어설 각오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포기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하겠다”면서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최고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역량이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제2 번째 불 조성으로 혁신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루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편으로 산업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혁신성장 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총선에서 제3당 될 것”

정동영 평화당 대표, 취임 1주년 맞아
“개혁연대·연합은 당의 생존 전략”
바른미래·정의당과의 연대 구상 제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를 통해 제3당을 올려서겠다”며 “선거제 개혁의 힘으로 확고한 다당제 제도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을 통해 평화당이 제3당으로 자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개혁 국회의 중심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및 정의당과의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더 큰 민주평화당을 위해 연합하고 연대하겠다. 개혁연대 및 연합은 평화당의 생존 전략”이라며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 제3진영의 통합과 연대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개혁그룹, 정의당과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겠다”며 “당내에 설치할 ‘큰변화추진위원회’를 정진기지로 해 총선승리 기반을 차근차근 넓혀가겠다”고 설명했다.

당권과 제3대파로 갈린 당내 분열에 대해서는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부터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바 대안정치 모임을 만든 분들의 충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총정에 더해 국민을 살리기 위한 충정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먹고 살 길을 찾게 우리가 살 길이다. 사리의 정치가 아닌 공의, 공의의 정치가 평화당이 갈 길이고 당이 커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당 내외에서 낮은 지지율로 낙담하고 있다. 당 지지율은 당의 생명선이다. 그런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사람은 국회의원 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당원 배가 운동에 나서자. 황주홍이 모델이다. 유권자 10만, 당원 5만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그런 자세로 노력하면 100만 당원 모집도 못 이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을 짓고, 지지를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지율은 정당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나이가 지지율도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과거 국민의당 시절보다 월등히 높고 전국 지지율도 적은 의원 수와 당원수를 고려할 때 다른 당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게 정 대표의 진단이다.

정 대표는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체정당이 될 것도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기득권 정당이다. 민주당 체제 아래 경제는 최악, 경계는 갈등, 평화는 제자리걸음, 사회는 분열, 개혁은 단 한 건도 없다. 전무하다”며 “강력한 개혁 야당이 있어야 말로만 개혁을 말하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분란만 만드는 집권여당을 견인할 수 있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개혁야당이 돼 기득권 민주당 대체정당으로 우뚝 일어서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개혁을 선도했고 이제 원수하겠다. 선거제 개혁, 분권형 개헌,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최선에는 평화당이 있었다”며 “힘이 모자랐을 뿐이다. 집권여당과 같은 힘이 있었다면 (개혁을) 이뤘을 것이고 강행처리를 통해서라도 완수했을 것이다. 강력한 개혁야당이 있어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분란을 만드는 기득권 여당을 막을 수 있다.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송두리째 바꿀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정치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지난 1년에 대해서는 “자강불식(自強不惠·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고 노력함)으로 도약의 기틀을 놓았다”고 자평하면서도 “정의당과 교섭단체가 무너진 것이 두고두고 안타깝다”고 돌아섰다.

정 대표는 “비교교섭단체의 한계로 인해 우리당의 역량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것, 보결선거 이후 교섭단체 재구성을 이루지 못한 것이 통탄스럽다”며 “‘평화화정의 모임’이 지금껏 유지됐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전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5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전북청년농업인 CEO협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하여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진성 기자

의료행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평화당 조배숙 의원,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은 5일, 사람에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의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만 근거하여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의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 진단 등 의료행위 방법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다. 의료행



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은 “법이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임을 강조하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